

민중참여 민중시대

새사회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 문서번호 : 대외-08-12-02 (2008년 12월 1일)
- 수신 : 언론사(진실화해위 출입기자, 정치부, 사회부, NGO, 인권담당 기자)
- 제목 : [성명]진실화해위원회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총 3쪽)
- 문의 : 새사회연대

[성명 바로보기\(클릭\)](#)

새사회연대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3주년 성명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실규명에 힘써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진실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12월 1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출범 3주년을 맞았다.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하 독립 운동부터 한국전쟁전후 억울하게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문제,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조작사건이 그 대상사건으로, 피해자와 유족국민들

의 끊임없는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오랜 운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했다.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통해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까지 했지만 국가 책무로써 극히 기본적인 형식적인 내용으로 권고한 국가 사과, 재심, 역사기록화, 위령행사 지원 등에 대해 관련기관의 이행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격하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모든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진실화해위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권고를 일개 부처 업무와 단순 민원처리 성격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 등 신뢰성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지난 3년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성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총 10,972건의 대상 사건 중 각하·취하·이송을 포함하여 33%(총 3,650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에서도 민간인희생사건은 7,807건 중 5,791건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 조사연장시한을 늘려 향후 2년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속도로는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와 정부는 진실화해위의 정상적인 작동과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와 유족 국민들의 오랜 통한과 숙원을 해결하고 국가의 공과를 제대로 가려 법치를 더욱 강고히 하려면 국가가 필요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책무이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의 업무방식도 국민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실화해위 결정은 내부조사와 위원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단지 결정만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에게는 수많은 개별사건처럼 보여지고 있다. 진실규명과정의 공개되어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피해자와 유족들도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명예회복과 진정한 화해조치가 가능하다. 진실화해위 조사과정에서부터 국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적극 공개하는 등 사회적인 공론화에 좀 더 힘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역사적 과오와 상처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해 이념공세와 정치적 매도 등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도가 일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진실화해위에 14개 과거사 위원회 통합을 주장하고 나서 진실규명 조사활동에 위협을 가하며 오히려 국가폭력의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지극히 몰역사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위험스런 억지주장이다. 진실화해위원회 흔들기는 위원이나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국민들에게 숨통과 같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는 행위임을 각성하길 촉구한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 사건들은 그간 국가에서 숨기고 싶어 철저히 외면했던 사건들이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공식적인 진상규명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이런 왜곡된 진실과 피해받는 국민이 있어서선 안된다.

새사회연대는 과거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피해 국민과 동시대를 사는 우리의 오늘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철저한 과거청산을 위해 피해국민과 제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1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